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쌍이다

관련 기사 4,5,6면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배경
3면

삼성 무노조 경영을 깨뜨리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8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2면

한국오라클 노동자 파업
2면

홍대 누드 몰카 범죄와
위마드의 페미니즘
7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김승주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에 들어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북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코앞이던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국정원은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모든 접견을 금지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들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고 밝은 색 점퍼나 운동화를 착용한 채 이동하는 모습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다. 우익들은 신이 나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 이 사건을 활용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허강일 씨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데려왔을 가능성(“기획 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번 허강일 씨 인터뷰는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면서 증폭시킨 셈이다. 민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당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민변이 묻지마 식 의혹을 제기한다며, 마치 자기네와 국정원이 탈북민의 인권과 신변을 걱정하길라도 하는 듯 말한다. 그러나 이는 역겨운 위선이다.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감시 하에 두고 있다.

민변이 인신구체청구(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있다고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도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민변이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위임받았음에도 민변의 접견 요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그 뒤로도 국정원은 여태껏 탈북 종업원들의 모든 신변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한 민변의 추가적인 소송도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센터에서 모두 퇴소해 접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판결했다.

우파들은 일부 탈북민들을 불순하게 이용하면서 대다수 평범한 탈북민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 왔다.(관련 기사: 235호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이 탈북민을 이용해 조작 사건을 벌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국정원이 어느 선부터 개입했고, 실제 종업원들이 속은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민변은 이 점에서 새 정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와 외교 관계를 이유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대상에서 이 문제를 제외했다.”

만약 이번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탈북민의 인권 문제와도 관련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계산을 앞세워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도 앞두고 있지만 자유롭게 못한 탈북 종업원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평범한 남북한 민중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탈북민들에게 이주의 자유가 있었다면 애당초 국정원 등이 ‘공작’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기획 탈북”론? – 진보진영이 조심해야 할 것

한편 “기획 탈북”이라는 용어는 남측 국가 기관이 개입하는 모든 탈북이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면 브로커가 개입하는 모든 탈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민 대부분에게 그런 수단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거나 병에 걸린 가족에게 돈을 보내 주려고 탈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북한의 감시와 중국의 단속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무법 지대에서 돈 떼먹고 협박하기 일췌인 브로커들에게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국가 기관이 그나마 안전한 길을 제시하면 그것이 ‘기획’인지 아닌지, 불순한지 아닌지를 떠나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남한 국가 기관의 손길을 잡았다고 해서 그 탈북민이 국정원과 한 편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속기만 했을

거라는 식의 흑백논리를 버려야 한다.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위선은 강력하게 비판하되, 탈북민의 현재 의사(남한에 남고 싶은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등)는 구별해서 봐야 한다.

그러려면 탈북민에 대한 국정원의 인신 제한과 감시가 먼저 풀려야 하고, 그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보 진영 내 일부가 이번 사건을 “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하루빨리 여종업원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것”(민중당 대변인 논평)을 요구하는 것은 선부르다. 탈북 종업원들 각자의 독립된 의사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

탈북 문제에서의 혼란은 자유 왕래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분명해질 수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손잡고 쉽게 걸어 넘어간 그 경계선을 넘기 위해, 탈

북민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 애초에 자유 왕래가 가능했다면 국경에 브로커가 들끓고 탈북민이 남한 국가 기관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서 살거나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꼭 김정은 정권의 편인 것이 아니고, 탈북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장 남한 사회를 무조건 옹호하는 우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파들의 위선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이미 3만여 명을 훌쩍 넘어선 남한의 탈북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울 수 있다. 그러려면 탈북민 자신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좌파가 이주의 자유와 자유 왕래를 굳건하게 지지하는 원칙적 태도로 앞장설 때, 남북한 민중이 국경을 넘어 연대해 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한국오라클 노동자 파업

글로벌 IT 대기업의 살인적 노동조건을 드러내다

대표적 IT 대기업인 오라클의 한국 법인 노동자들이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오라클노동조합(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은 지난해 9월 결성해 이번이 첫 파업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오라클은 〈포브스〉가 꼽은 세계 최대 상장 기업 목록의 소프트웨어 분야 2위를 차지했다. 이 기업의 매출은 약 40조 원, 시장가치는 195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오라클 노동자들의 처지는 충격적이다. 노동자들은 IT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과 무급 초과 노동은 물론이고, 상시적 고용 불안과 성과연봉제로 고통받아 왔다.

기술직 노동자들의 주된 업무는 고객사에 대한 기술지원이다. 고객사는 삼성, 농협 같은 대기업들이다. 고객사는 ‘고급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술자를 하루 8시간 사용하는 데 100만 원 넘게 지불한다. 장기간 파견

나가는 경우 월 2000만 원 이상 지불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임금이 오른 노동자는 거의 없다.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 세전 월급이 283만 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엄청난 착취율이다.

일부 노동자들만 임금을 20~30퍼센트씩 올려 주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영업직은 성과급 비중이 50퍼센트나 된다. 기술직조차 성과급 비중이 20~30퍼센트다.

사측은 한 노동자의 영업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성과급 지급 결정을 50여 일 앞두고 목표치를 2.4배나 올려 버렸다. 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라고 봤지만 한국오라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오라클이 임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5월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한 한국오라클 노동자들

오라클은 고용유연성을 매우 강조하며 팀별로 인원을 관리하면서 매니저(중간 관리자)의 권한을 강력하게 둔다. 이런 구조에서 심지어 회의 시간에까지 “야 임마”, “ㅇㅇ새끼” 같은 폭언이 오간다고 한다.

안종철 오라클노조 쟁의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문 기술자를 정리하고 간접비용 부담이 적은 내근직을 많이 뽑고 있다. 그에 따라 기술자 수는 줄었는데 기존 제품에 대한 지원 수요는 그대로라 기술자

들의 노동 강도가 늘었다.”

김철수 오라클노조 위원장은 “오픈채팅방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고객사에 파견 나간 기술자가 [어떤 주에는] 110시간을 일했다고 했다” 하고 말했다.

오라클노조는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7일 대의원 회의를 통해 2차 파업이나 무기한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나해 촛불의 승리 이후 오라클뿐 아니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시사적이다. 다른 IT기업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오라클노조의 투쟁이 승리해 더 많은 IT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바란다.

안형우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와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을 계기로 중동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방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옥죄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전쟁을 부추겨 왔다. 그 역사를 닉 클라크가 살펴 본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제재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보통사람들이 최대 피해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저항을 촉발하기도 한다.

지난 70년의 이란 역사를 보면, 서방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란의 천연 자원에 군침을 흘려 왔다. 그래서 1953년 이들의 정보 기관은 이란에서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이전인] 20세기 전반부에 영국은 이란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석유를 마구 퍼갔다. 오늘날의 [세계적 석유 기업인] BP가 그렇게 탄생했다.

영국 국가가 51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던 앵글로-이란석유회사(AIOC)는 어쩌나 막강했던지 사실상 이란을 좌지우지했다. 당시 이란의 '샤'[이란어로 '왕'이라는 뜻]와 그의 정부는 석유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란 지배자 레자 샤는 노동조합과 정치적 반대파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 짓밟았다.

그러나 중동 전역에서 영국 제국과 식민 통치에 맞서는 저항은 성난 파도처럼 일었다.

1951년 이란에서 사는 그 압력에 밀려 세속적 민족주의자 모사데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모사데그가 이끈 민족 전선은 의회에서 다수당이 됐다.

모사데그가 이끈 민족주의 운동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한 진보적 운동이었다. 이들은 중동의 다른 민족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에 도전했다.

모사데그는 무상으로 앵글로-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했다. 이는 영국 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었고,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이란의 주요 항만 도시이자 대규모 정유소가 있는] 아바단에서 정유 공장을 되찾겠다며 이란 침공을 검토했다. 당시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는 이에 반대했다. 그의 정부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식민 통치 반대 투쟁을 분쇄하는 데, 이집트에서 영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한국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지원하는 데 영국군을 보낸 상태였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이 영국의 이란 침공을 반대했다. 애틀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미국과 행보를 달리 할 여력이 없다"고 시인했다.

미국에게 영국의 석유 이익을 지키는 것은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은 중동을 주름잡는 영국의 지위를 자신이 대체하길 바랐다. 그러나 미국도 모사데그는 우려했다. 모사



최근 중동에서 고조되는 위기에는 미국의 이란 적대 정책이 핵심에 있다 (위) 14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하고자 대사관 이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미국 트럼프 정부. (아래) 1979년 혁명 당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 미국이 파시시킨 샤(왕)의 송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

데그는 독에 구멍을 낸 것과 같은 구실을 했다.

모 사 데 그 가 정 부 를 구 성 한 [1951~1953년] 2년 동안 평범한 이란 인들은 더 많은 경제 개혁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란 공산당인 투데당이 성장해서 모사데그를 대신할까 봐 걱정했다. 투데당은 파업과 거리 투쟁, 시

위를 조직했다.

2013년과 2017년에 미국 중앙정보부 CIA는 모사데그를 내쫓는 데서 자신들이 한 구실을 기록한 문건의 비밀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이를 보면 CIA는 당시 투데당의 지지가 커져서 이란이 스탈린주의 소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뜩 겁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IA는 심지어 모사데그 지지자들을 모아서 투데당에 맞서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1953년 4월 미국은 모사데그를 내쫓기로 결정한다. CIA와 영국 정보기관인 MI6는 모사데그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지도한다.

CIA는 모사데그의 주요 정적인 파즈롤라 자헤디에 접근해 그를 총리로 대신 앉히려 했다.

1차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다. 자헤디는 CIA가 제공한 은신처로 숨어야 했고 샤는 이라크로 도망쳤다. 그러나 쿠데타 직후 벌어진 혼란 와중에 CIA 요원들은 언론을 통해 모사데그 반대 선동을 하는 데 전력했다.

며칠 후 샤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섰고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졌고 결국 성공을 거뒀다. 모사데그는 체포됐고 이

후 남은 생애를 감옥과 이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다.

쿠데타 직후 CIA는 자헤디 정부가 유지되도록 수백만 달러를 은밀히 지원했다.

미국의 대대적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은 샤는 새로운 군사 독재를 실시했다. 이제 이란에는 미군 2만 4000명이 주둔하게 됐고, 수도 테헤란에는 CIA 중동 본부가 들어섰다.

CIA는 이란에서 새로 창설된 보안경찰 사바크를 훈련시켰다. 사바크는 무수한 이란인을 살해하고 고문했다.

미국 기업들은 부흥하던 이란 석유 산업을 나눠 가졌다. 수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다.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었다. 1977년 경제가 추락하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대중 시위에 나섰고 이내 이란 전체를 뒤덮은 혁명으로 발전했다.

대규모 파업 물결이 일었고 게릴라 전투가 벌어졌다. '쇼랴'라고 불린 파업 위원회가 공장을 장악하고서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뿐 아니라 시 낭송회 같은 집회에도 수만 명이 몰렸고 나중에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실로 강력한 민주주의 각성 과정이었다. 늘 그렇듯, 미국은 이를 꺾으려

했다.

모사데그를 내쫓았던 바로 그 샤는 1979년, 평범한 이란인들의 손에 쫓겨났다. 미국은 그가 도피할 곳을 제공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했다.

혁명은 복잡한 과정이다. 샤가 몰락한 이후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끄는 중간계급 세력이 지도력을 잡았다.

성직자 루홀라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새로운 억압적 정부가 탄생했다.

호메이니는 좌파와 노동자 조직을 탄압했지만 미국에 맞섰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

1979년 11월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그 직원들을 1년 넘도록 인질로 잡아뒀다.

그 학생들이 내건 요구를 보면 미국이 지원한 억압적 [샤] 정권 하에서 이란인들이 느낀 분노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샤를 재판에 세울 수 있도록 이란으로 돌려 보낼 것, 미국이 가하는 제재를 해제할 것, 모사데그 제거 쿠데타에 대해 미국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이란 정권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광 대통령 트럼프나 그의 서방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명분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다. 중동에서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보유한 전쟁광 독재자들 중에는 서방의 최측근 동맹도 여럿 있다.

진정한 문제는 이란이 [1979년] 혁명 이래로 미국 제국주의와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 혁명 이듬해에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8년간 지속됐고, 이란인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했고 파괴했다. 1988년에는 심지어 이란 민항기를 격추해서 29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국이 수년째 이란에 가하는 제재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줬다. 중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의약품도 심각하게 부족하다.

2015년 핵 협정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나마 누그러뜨린 것이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이 핵 개발 제한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었다.

핵 협정 이후에도 미국의 이란 위협 정책은 계속됐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제재를 부활시키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도록 고무하고 있다.

미국은 1953년에도 그랬듯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는 평범한 이란인들이 느끼는 분노를 보여 준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정한 변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40호 / 번역 김중환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음에도,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실망이 커지고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민주노총 논평의 제목은 이렇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이 가시적 행정조치에 멈췄고, ‘노동존중’이라는 기치에 걸맞은 개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점증하는 노동자들의 불만

물론 노동운동 내에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를 둘러싸고 온도 차이가 있다. 최근 몇몇 노동운동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도 이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의 “종합 평점”을 후하게도 A를 줬다. 특히, “1년 동안 일자리(노동)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의 정의당 썬크탱크 구실을 하는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이 “급진적”이라고 높이 사면서 노동운동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노동조건 개선” 같은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정치적 과제”들을 전략적 의제로 삼으라거나,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등의 조언이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에 참석했던 노동조합 측 패널들의 뉘앙스는 조금 달랐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 현실에 “근본 변화(가) 없”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노동운동 노선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과 가까운 입장이지만, 문재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훨씬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말뿐인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선 사회 집단은 노동자들이 유일했다. 5월 1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금속 노동자들이 맞고 있는 현실은 노중기 교수의 인식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금속노조는 ‘문재인 규탄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노동자 자르기’” 식이라고 규탄했다.

이같은 온도 차이는 개혁주의 정치인, 학자, 전문가보다 노동조합 상근간부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압력을 더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노동조합 상근간부들은 때로 실천에서는 결국 개혁주의 정치인, 학자,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 대해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자 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높이 평가받은 노동정책이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고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투쟁에 나섬으로써, 정규직 전환 제외 문제와 해고 위협 등을 들춰 냈다. 또, 청소 노동자와 마트 노동자들도 항의에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려는 사용자들의 꼼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재인 정부의 제도(산입범위) 개악 의중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내 의견 분포

나 지도부의 입장도 일부 바뀌었다. 최근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등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기준 재검토”를 주장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자회사 방안에 관한 비판이 증가한 것도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며 좀 더 지켜보고 했던 노동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춰 줬기 때문이다.

고용도, 임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선 사회집단은 노동자들이 거의 유일했다.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불러 낸 것은 진정한 변화에 대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촛불 투쟁과 정권 교체라는 여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 중심”, “노동존중” 같은 그럴 듯한 기치와는 달리 실제 정부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적잖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분야를 살펴보자.

첫째,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는데, 이 분야 성적표는 형편없다.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처음에는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큰 불만과 저항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전환 제외 대상이 많았고, 전환된 노동자들의 조건도 ‘정규직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선되지 않았다. 자회사 방식이 널리 이용됐고, 차별이 온존했고, 전환자들을 저임금에 고착시키는 임금체계가 부각됐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제조업 구조조정이다. 한국 GM과 조선업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

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이윤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관철은 일자리에서 몰아낸 것이다. STX 같은 중형 조선소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감이 뺏히 있는데도 무급휴직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했다. 사용자들은 악화된 노동조건을 조선업 빅3 사업장에도 적용하려 한다.

둘째, 문재인은 ‘노동존중’을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 배제가 여전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악속 불이행의 대표 사례 하나는 노동기본권 문제다. 전교조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약을 고친 대가였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에 규약 시정을 요구했는데, 혁명적 좌파를 비롯한 극소수 활동가들만이 이에 반대했다. 이런 반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아비하고 수처스런 규약 개정 압박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악속 불이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핵심 이유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약속과 관련해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곳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세종호텔 측은 노조의 핵심 요구인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임금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발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

다.” 사용자들이 임금을 올려 주기보다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제도 개악(산입범위 확대)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임금체계도 제시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또, 고용 상황을 보면,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3월 실업률이 4.5퍼센트로 나타났는데, 17년 만의 최고치라고 한다. 청년 실업률은 11.6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성과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기 불황과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노동계를 향해 성급하게 요구하지 말고 1년만 참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문제점이 해결되기는커녕 불만과 갈등이 누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여전한 쟁점인 한편, 구조조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임금체계 개편도 점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왜 실망스런 수준인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한국 사회 노동문제가 누적된 게 많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한꺼번에 개선하려고 정부를 압박하기보다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고 ‘투

▶ 5면으로 이어짐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머쥔 탕디 노동자들. 5월 11일 제화노동자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김영익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 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였는데, 그는 이렇게 약속했다.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미국 일변도 외교로 치달아 위기를 자초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취임사에는 앞의 말과 근본에서 충돌하는 요소들이 있었다. 그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대대적인 군비 증강도 공언했다.

취임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은,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그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비슷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의 운명》(가교출판)에서 노무현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노선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되 지나친 대미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외교를 지향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간 갈등이 점증하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속에서 이런 노선은 근본에서 좌충우돌을 예고한다. 2006년에 노무현이 어느 연설에서 “헛갈리지요? 저도 헛갈립니다”고 말했을 만큼 노무현 정부는 균형외교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그래서 “친미적 자주”라는 앞뒤 안맞는 말을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FTA 체결 등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갔다.



위험한 줄타기 친제국주의 태도와 안정적 평화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미·중 갈등이 그때보다 훨씬 더 노골화돼서,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될 잠재적 모순과 한계는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

“헛갈리지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이 지난 1년간 실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 몇 가지 핵심 이슈 중심으로 보자.

우선, 사드 배치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사드 배치를 밀어 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했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북한과 추진하기로 한 지금도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새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

적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서 드러나듯이, 그 전략의 중요 요소에 대한 협력을 모두 마다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드 문제로 반발하는 중국과 화해하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엠디, MD)에 편입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 엠디 훈련에는 공식 참여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도 같은 형태의 문제가 드러났다.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사드식 해법”을 추진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대화는 계속하되, 이미 벌어진 일(위안부 합의)을 애써 뒤집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아니라고는 발표했지만,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이 준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도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구축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에 타협한 결과다.

신의 한 수

일각에는 사드, 위안부 합의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린 문제적 결정들이 모두 지금의 정상회담 정국을 열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는 호평이 있다. 이런 칭찬에는, 정부의 외교·안보를 좌파적 견지에서 비판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내대는 꼴이란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

분명 지난해 “화염과 분노” 상황에서 견줘, 지금 대화 국면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정적 평화가 성취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물음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의 거의

판박이다.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나 싶을 정도다. 이런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합의보다 그 이행이 훨씬 더 어렵다는 방증이다.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이 가능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정적 합의가 향후 남·북/남·북·미 대화에서 도출될지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국제정세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마저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변수다.

따라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향한 길은 가늘고 긴, 무엇보다 불확실한 과정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서 취한 태도는 시사적이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도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 사이의 “중재자”로서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설사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제국주의적 태도다.

이런 주장은 문제적이다. 지난해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로 가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그 기지를 지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 가장 가까운 해외 미군기지다. 이 기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커다란 위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택 미군기지 같은 미국의 대중국 발진 기지와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화 체제’ 하에서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봐도, 노동자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기대를 품지 말고 그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평화운동 건설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5월 10일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했다.

▶ 4면에서 이어짐

쟁 일변도’로 나아가면 소탐대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은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를 효율화하고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지금 사용자들은 양보를 꺼리고, 줬던 것도 빼앗아 가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아무리 그럴 듯한 말로 포장돼 있을지라도 그 친자본주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운동이 사용

해 온 용어를 차용하면서 본질을 가리려 하지만, 장기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억제하고, 일부 부문에게는 조건 악화마저 강요하려 한다.

가령 문재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표방하며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적 저임금에 반대하고 임금 수준을 공정하게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안’을 보면 그 묵직한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 좌파가 문재인 노동정책의 친자본주의적 본질을 들춰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같은 장기 불황기에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거나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고, 연대가 관건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기’를 선택해 시간을 까먹고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해서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거나 심지어 조건 악화를 불러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GM과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양보 교섭

이 그런 사례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방안 합의도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노동조합 내의 좌파들 상당수가 여기에 타협하기도 했다. 이 점에서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즉, 연대의 중요성을 알고 헌신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혁명적 좌파가 기층에서 조직돼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정부와의 협조 강화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최근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쫓돌 투쟁 전후로 노동운동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노동자 부문이 투쟁에 나서

는 것도 이를 입증한다.

예를 들어,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의 파업은 IT업계 노동자들이 새로 조직되고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여 준다. 얼마 전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탤디 노동자들도 단호하게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앞서 다룬 주요 쟁점들에서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그중 일부는 투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 혁명적 좌파는 이런 투쟁들을 지지하고 연대를 확대하고자 애쓰면서 세력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5월 10일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했다.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문성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런 공격은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쟁점들에서 문재인 세력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다. 여론 공작과 달리 노동자들은 문재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약속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가령, 최근 민주노총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7만 6447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자료를 더 살펴보면 “[가입 증가 추세는] 2016년부터 목도되고 있는 경향”(민주노총)이다. 촛불 전인 2016년에 이미 3만 6343명이 가입해 가입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이를 봐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던 노동자 투쟁이 촛불보다 선행 요인이었던 것이다. 신규 가입이 가장 많은 공공운수노조, 보건노조 등은 박근혜 첫해부터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노조들이다.

민주노총도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며, 2016~2017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데 대한 대중적 주목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투쟁이 매개가 돼 촉발된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쫓아냈고 우파를 약화시켰고, 덕분에 문재인이 집권했다. 따라서 문재인이 노동자 투쟁에 빚을 진 것이지, 그 반대가 전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 문제를 보자.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자 노무현 계승 정부다. 민주당도 지배계급 기반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김동연 같은 경제관료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노조 파괴 공작 연루자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주로 노무현의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 많다. 김경수도 그중 하나다.

전임 민주당 정부들은 “제3의 길” 노선을 추구해 왔다. 이를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으로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 어젠다를 풀어 말하면, 시장경제



‘변화’의 성격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에 빚지며 탄생하고도 노동계급 염원과는 함께 가려 하지 않는다

에 강조점이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성장에 강조점이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문재인이 개혁은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을 제고하려는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재벌 개혁”은 포퓰리즘적인 구호지만, 노동자들 편에 서는 반기업주의가 전혀 아니다. 바이오(의료 민

영화) 등 신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벌들이 문어발 구조에 안주하지 말고 투자를 늘리라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도 경쟁에 끼게 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기업이 해고를 더 쉽게 하되, 대신 조금 더 관대한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주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복지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는 이렇다.

“재벌 독과점이 문제다. 이들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재벌의 갑질에는 고임금을 압박하는 강성노조가 중요한 요인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 정규직과의 차이를 좁히면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규직이 임금을 내리면 이런 상생이 가능하다(문재인 식 동일노동동일임금).”

결국, 경제주체간 상생과 소득주도성장에서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양보가 핵심 내용이다. 이런 양

보를 받아 내려니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이 정치 개혁도 자신들이 한국 자본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정치 구조를 시스템화(견제와 균형)해서 누가 집권해도 안정적인 통치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 신장은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김정은과는 “10조 월북”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보다 먼저 노무현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은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 당선하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법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추진도 해 보기 전에 임기가 끝나 책임 정치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문재인이 개헌안에 반영돼 있다.

또한 적폐 청산 염원을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해 경쟁세력인 우파에게 유리한 인적·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

고, 중도·진보 포퓰리즘 세력을 포섭하는 효과도 노린다.

안보에서의 목표도 ‘부국강병’이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다. 진보를 자처하지만 한미동맹 유지·강화에 이견이 없다. 자주 국방도 강조한다.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에 한국이 더 기여해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더 높이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친미적 자주, 좌파 신자유주의, 사회적 대화 중시 같은 노무현 정부의 특징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계급 화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 후 얼마 안 가서 진보 개혁을 바란 대중의 실망과 반발, 환멸과 분노에 부딪힌 전임 민주당 정부들과 문재인 정부는 달라 보인다. 왜 그럴까?

앞서 지적했듯이 정권 출범 전후의 사회적(계급) 세력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훨씬 더 반(反)우파 흐름이 강력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임기를 시작했다.

1주년을 맞아 <한겨레>는 문재인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들로 남북 정상회담, 촛불 뒤 역전된 보수·진보 지형, 보수 야당의 지리멸렬 등을 꼽았다.

남북정상회담 당일 한 독일 기자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이번이 다른 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회담을 여는 거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은 높은 지지율의 계기이지 원인은 아니다. 강력한 반(反)우파층의 형성이라는 세력균형 문제를 더 주된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

문재인은 촛불 때부터 지배계급 다수에게 자신이 이 성난 대중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그 염원을 받아안은 시늉도 해야 한다. 사실 이것이 핵심 딜레마다. 적폐 청산을 공언했지만 가다서다 하며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양쪽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5월 10일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축약·보완했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이 사측 총괄 책임자를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다.

(올게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반대 견해를 제출했고 구속이 확정됐다.)

조건준 씨는 해당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직고용 합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섭에서 합의를 강제할 힘은 사측의 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달려 있다. 책임자 처벌은 최종법, 엄호석 열사를 잃고 혹독한 탄압으로 고통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다.

따라서 이번 탄원서 작성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조건준 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협상에서 사측과의 1대 1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관여해 노동조합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

금속노조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



박설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파업 집회

홍대 누드 모델 몰카 범죄로 돌아본

위마드 식 페미니즘의 논리적 귀결

정진희

최근 홍대 회화와 누드 모델로 일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위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위마드 회원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동료 누드 모델 여성이 최초 유포자로 밝혀졌고 증거 인멸 시도가 발견돼 구속됐다. 피해자를 조롱한 댓글을 단 위마드 회원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성범죄에 굶뎠던 경찰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도 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사흘 만에 32만 명이 동의했다. 많은 여성들이 그 동안의 경찰 대응과 견줘 허탈감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이런 정서는 이해가 간다. 한해 5천 건이 넘는 몰카 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피해를 호소해도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이 청원이 폭발적 관심을 끌자 문재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범죄에 고통받는 여성의 피해 호소에 수사기관들이 당연히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페미니즘 언사만 남발할 뿐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개혁은 별로 내놓고 있지 않다.

집권 1년이 지나도록 노동계급 여성들의 절실한 요구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 복지 확충은 별로 진전된 게 없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로 알량한 개혁마저 후퇴하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계급 여성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생색내기에 환상을 품으며 국가기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위마드가 온갖 욕설을 사용하며 남성을 비하해 온 것은 악명 높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비하



남성 일반을 여성의 적으로 여기는 근본적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은커녕 퇴행적 궤변과 피압박자들의 분열만 낳을 수 있다

를 하지 않는 대상이 없을 정도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조롱, 멸시도 눈에 띈다. 심지어 자신들 성에 차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거침 없이 욕설을 퍼붓는 글을 게시한다. 위마드 회원들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공유해 본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최근 고려대 총학생회가 위마드에 고려대 남자 화장실 몰카 사진이 올라왔다고 밝혀 경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상 이런 비하 글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몰카 촬영·유출은 그 피해가 훨씬 더 심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미러링’이라며 미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위마드는 이번 위마드 회원 구속을 “경찰의 편파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마드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한 다음 카페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열겠다고 한다. 경찰이 남성 몰카 피해자 수사에 만 이례적 속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여성 대상 몰카 범죄

에 무관심하게 대응해 왔다고 해서 위마드 회원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위마드의 역차별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위마드 비판 꺼리기

이번 홍대 몰카 사태로 위마드가 페미니즘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 발생 이유가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위마드는 페미니즘과 무관하다고 단언한다.

페미니즘이 이번 몰카 사태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과도한 비약이다. 페미니즘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상대 몰카 범죄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한 페미니스트 손희정 씨의 주장처럼 위마드가 “페미니즘이 아니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 올해 3월에 이프북스가 출판한 책 <근본없는 페미니즘>의 부제가 바로 “메갈리아부터 위마드까지”이다. 한국여성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 책은 메갈리아를 거쳐 위마드 활동을 한 필자들이 위마드를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예찬하고 있다.

손희정 씨가 위마드를 거부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그도 불과 2년 전에는 위마드를 “페미니즘 운동”으로 봤다(당시에도 거리를 느꼈지만). 한국여성재단 주최로 열린 ‘2016 여성 회의: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에도 위마드 회원이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페미니즘과 위마드와의 연대가 한동안 페미니즘 내 화두가 됐다.

위마드는 새 세대 페미니즘에서 득세한 페미니즘, 즉 모든 남성을 여성 차별의 원인으로 보는 근본적 페미니즘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냈다.

위마드 게시판에는 단지 남성 혐오만이 아니라 장애인 비하, 빈민 비하, 이슬람 혐오 등 온갖 반동적 사상들이 다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 국면에서는 위마드 게시판에 박근혜 지지 글이 대거 올라오기도 했다. 이것은 근본적 페미니즘이 가장 진보적이

기는커녕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우파 정치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진보 성향 페미니스트들이 위마드와 연대를 추구하며 공개 비판을 꺼리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진보 성향 페미니스트들은 위마드 회원들이 박근혜를 지지했을 때조차 “위마드가 보수적이어도 페미니즘의 일종”이라며 위마드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들도 모든 남성이 여성 차별의 근원이라는 근본적 페미니즘의 주장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계급을 무시한 모호한 ‘남성 권력’ 개념,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강간범 취급하는 주장을 주류 페미니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주류 페미니스트들도 위마드처럼 모든 여성이 계급을 초월해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기구와 기업의 요직으로 진출하려는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은 위마드 같은 극단적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아도 흔히 분리주의적 주장을 이용해 기성 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 한다.

미러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성 차별에 항의하려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반발에는 그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모든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러링이 기존 여성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여성 차별은 남성의 본성이 아니라 계급사회에 기원을 두고 있고, 자본주의의 착취적 계급구조와 핵가족 제도에 물질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구조에 도전하지 않은 채 모든 남성을 적대시하며 분리주의적 저항을 하면 잘 해야 약간의 개혁 성취에 머물고 흔히 퇴행적이기 쉽다.

여성은 하나의 이해관계를 지닌 동질적 집단이기는커녕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아·조현민 자매와 그 모친 이명희의 갑질에서 보듯 여성 내부에도 엄청난 계급적 격차가 있다. 모든 남성을 적대시하는 근본적 페미니즘의 주장과 실천은 운동의 전진이 아니라 곳곳에서 불필요한 분열을 야기해 왔다.

위마드 몰카 사태를 통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여성운동에도 역효과를 낳을 근본적 페미니즘이 지닌 위험성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정의당 여성위원장의 분열주의적 행태에 침묵하고 있는 권수정 정의당 후보

김지윤

노동자연대는 4월 18일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비례후보에게 공식 질의를 발송했다. (1) ‘2018 3시스템 공동행동’에서의 부당한 노동자연대 배제 결정, (2) 정의당 여성위원장이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한 권 후보의 입장을 질의했다.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강간

혐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의문 제기를 문제 삼아 연대체에서 노동자연대를 배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연대체에서 노동자연대를 추방하려다 실패했음에도, 반성을 모르고 또 다시 배제를 주도했다.

이 행위는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오랫동안 여성노동자 운동에 헌신해 온 좌파 노동단체를 배제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

동 내에서 불필요한 분열을 조장해 운동을 파편화시키고 약화시킬 뿐이다. 또한 필요한 토론을 가로막아 운동의 발전에 해악적이다.

노동운동의 분열은 정의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당 여성위원장이 이런 분열주의적 결정에 동조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권 후보는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 1번으로서, 서울에서 정의당에 대한 정당 투표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

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권 후보의 입장은 진보 계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 지지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권 후보는 2014년에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 선거운동에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운동의 결속과 발전의 측면에서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권 후보의 책임감 있는 답변이 기대된 이유다.

하지만 권 후보는 입장을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약속과 달리,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권 후보가 노동자 정당의 후보로서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노동운동 내 해악적인 분열주의와 배제주의적 행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정의당·민중당 실천과 공약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5년의 끈질긴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커다란 파열구를 만들어 냈다.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를 계기로 조직화와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사진)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에게서 직접 고용과 노조 인정을 받아 났습니다. 성과를 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으로 삼성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이 정도의 양보가 아니고서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도 감안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박근혜 퇴진 촛불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노조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 삼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매주 서울뿐 아니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전국 곳곳에서 10만 장씩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즉, ‘이재용 구속’ 요구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성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6000건의 노조 파괴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6000쪽이 아니라 6000건입니다. 세부 기획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추가로 압수된 문건도 있고,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CCTV 외장하드 200여 개가 압수됐습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운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바로 이번 합의를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분열 위기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 싸웠기 때문에 삼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조합원 스스로가 투쟁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삼성을 바꿔서 세상도 바꾸자’는 자긍심 말입니다.

우리 노조에는 ‘4불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발하지 않는다, 단식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투쟁이 장기화되고 지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하자, 무엇보다 조합원 전체가 함께 투쟁하자는 말입니다. 결의된 소수만의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사진

합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접 고용의 조건에 대한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의 이후 조합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 1000여 명이 늘어서 조합원이 두 배가 됐습니다. 노조 가입 문의가 많고, 노조도 적극 조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용 안정만 추구했다면 기대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함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에게 처우 개선 요구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임금체계 때문에 비수기에겐 저임금에, 성수기에는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았다. 그래서 고(故) 최종범 열사는 유서에 ‘배고파 못 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천공항, SK브로드밴드 등의 합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우가 그대로라면 그것은 정규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미 원청에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즉, 동일노동 동일처우가 우리의 요구입니다.

지회가 ‘공세적인 조직화’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비조합원들은 노조가 탄압받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입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 소식을 비조합원들에게 알리며 가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있는 곳부터 비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직해 유니온숍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이려면, 비조합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전면 사진

5년의 저항이 정치 상황과 맞물리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깨뜨렸다

합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만이 아니라 삼성 전체에서 조직화를 추진해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 삼성의 노동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틈이 보이면 사측은 더 치밀하게 노조를 탄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삼성 전체에서 노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민주노조가 이미 있는 곳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지회, 삼성웨스트리, 삼성에스원을 집중적으로 조직해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계열사의 노동자들이 들어와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돼 줄 수 있도록 말합니다.

(성공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교섭과 투쟁이 병행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조직화되면 파업으로 조직을 확대·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이 바로 조직화도, 투쟁도 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호석 열사 4주기인 5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 계획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이 마음 놓고 노조를 탄압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주요 기관과 유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말해 왔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

동자들이 눈물 흘리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그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노조를 만들어보니, 노조에 가입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요구는 ILO 핵심 협약 인준과 노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진척이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해도 해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파업할 때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섭에 하청 바지사장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노조법 개정의 내용입니다.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를 위해 먼저 투쟁에 나설 테니, 전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직화와 투쟁을 시작해 7월 14일에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삼성 3사 노동자들과 합동 파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파업은 하반기 본격적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때 촛불 투쟁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10만 명 이상을 모아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민주노총과 제 시민사회에도 이 같은 하반기 투쟁과 삼성그룹 조직화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 관련기사 6면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

7월 19일(목) ~ 22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들과 청년·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